김정일 중국행 열차 탔나 안탔나

전용열차 신의주 발견 이후 행방 묘연
中 정부 부인 불구 訪中 가능성 높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로 동북아 외교계가 혼탑스럽게 돌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북한 국경 근처인 신의주에서 발견되면서 방중 임박을 예고했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각국 외교 공식채널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북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성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중 임박 또는 이미 중국에**=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5일 "김정일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열차가 현재 신의주역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열차의 움직임과 다른 주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김 위원장이 곧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최근 구성의 공장을 시찰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특별열차와 함께 신의주에 체류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면서 "중국 방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 당국이 신의주시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뒷받침했다.

특히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이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신의주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일부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중국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방중 확인 안돼**=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확인할만한 상황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신의주 방문과 연결도로 차단도 산업시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당국도 방중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중국 정부 측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문에 대한 어떤 예정도 알지 못하며 준비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내가 아는 한 어떤 준비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더이상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특별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출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오보"라며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을 방문하냐"며 방중설을 부인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도 김 위원장 방중설에 대해 "아직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중 성사여부도 아직은 불투명**=김 위원장의 방중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주재하는 북핵 6자회담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에서 박우희(왼쪽에서 세번째) 서울대명예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수등 지식인 700명 "단독 작통권 반대"

'선진화국민회의' 성명

전·현직 교수와 학자 등 지식인 700여명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성명과 성명에 동참한 지식인 70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이석연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안보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보 악화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지식인들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구조에 비판의식을 갖고 작통권 환수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미관계는 상호존중의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최적의 안보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작통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우리는 아직 단독행사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문용린 전 문교부 장관, 박이문 연세대 특별교수,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허형 중앙대 대학원장 등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與, 참여정부 前고위직 '자숙' 촉구

정부 정책 정면비판에 제동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5일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자숙'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기자실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최근 참여정부에서 고위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 야인이 된 이후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관련돼있던 정책의 취지조차 부인하는 일련의 흐름을 개탄한다"며 "자숙하고 절제된 언행을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참여정부 전직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반대운동의 전면에 선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여당은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의 대북정책 및 자주외교 비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한.미 FTA 졸속 추진 주장, 김희상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의 작통권 환수 반대론 등 전직들의 '반란'에 조 전 장관까지 가세하자 더이상 이런 흐름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듯하다.

이와 관련, 우리당 임종석 의원도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겠지만, 신중해야 할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책에 대한 공동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뭔가 할 말이 있다면 조용히 전달해야지, 몸 담았던 정부에 부담을 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정무특보단 5명 안팎 비상근 운영키로

청와대는 조만간 구성될 정무특보단 인원을 5명 내외로 하되 비상근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정무특보단을 위해 청와대내에 연락사무소 수준의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당과의 소통구조를 활성화하기 위 해 확대개편하기로 한 정무특보 인원을 5명 내외로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숫자는 신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누구를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임명될 정무특보가 순차적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재 정무특보로 지난 8.15 광복절 특사때 사면.복권된 신계륜 전 의원과 안희정씨, 노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시내버스 협상 막후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지난달 말 원만하게 타결됐다. 연례행사이던 '꼭두 새벽 파업'이 신기하게도 되풀이되지 않은 것에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았겠지만, '이번엔 파업 안할 줄 알았다'가 협상장 안팎의 주된 분위기였다.

시내버스 노조가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의 연내 시행이라는 '큰 떡'을 앞에 두고 시루까지는 깨지 않을 것이라는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협상 초반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거부하겠다"며 거칠게 나왔다. "임금을 10.1% 올리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사측인 버스운송조합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시민 불편을 볼모로 광주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파업 찬성까지 결의해 9월 1일 새벽 4시를 총파업 출발점으로 예고했다.

다급해진 광주시가 결국 나섰다. 대외적으론 노사 양측을 중재하는 모양새였지만, 끝까지 중재자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노조는 임금인상·구조조정 중단 요구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연장 ▲광고수입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측을 오가던 광주시는 협상의 매듭을 풀기위해 임금을 다소 올리고 일반대형버스를 중형(中型)으로 줄여 비용을 정감하는 대신 구조조정은 더이상 하지않는 안을 버스조합에 주문했다.

조합은 기다렸다는 듯 ▲무료환승 적자 보전 ▲버스요금 인상 ▲임금 인상 소급분 지원 ▲재정지원금 조기지급 등 손 벌릴 수 있는 것은 다 벌렸다. 노사가 '짜고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이 잘 맞아 돌아갔다. 심지어 일부 버스회사 경영진은 노조원인 버스기사들에게 사전에 '무료환승을 거부하라'고 부추겼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시는 무료환승에 따른 업체 손실액의 일부인 20억원을 보전해주고, 연내에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한다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압박해오는 시내버스 노사 앞에서 '중재자'는 졸지에 '사용자'로 자리바꿈하면서 시민 혈세로 파업을 막은 셈이다.

시가 연내에 시행할 준공영제에 쏟아부을 지원금은 제도 시행 전 적자 보전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연간 150억원 선. 정시에 도착하는 편안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겠다는 기대보다는 또 어떤 구실로 주머니를 털릴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jjnews@kwangju.co.kr